

제2회의
한국의 대미·대일 전략

2019년 한미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김 영 준 (국방대학교)

2019년 한일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진 창 수 (세종연구소)



2019년 한미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김 영 준(국방대학교)

목차

- 2019년 한미 관계
- 미국인의 미국, 한국인의 미국
- 2020년 한국의 전략
- 정책 제언

2019년 한미 관계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2월 27일-28일)
- 2019년 6월 남북미 DMZ 만남 (6월 30일)
- 2019년 한미 정상회담 (4월(DC), 6월(서울), 9월(NYC))
- 지소미아 / 방위비 분담금

미국인의 미국, 한국인의 미국









Top News Show Program

1. Hannity
2. Tucker Carlson Tonight
3. The Rachel Maddow Show
4. The Ingraham Angle
5. The Five
6. The Last Word with Lawrence O'Donnell
7. Special Report with Bret Ba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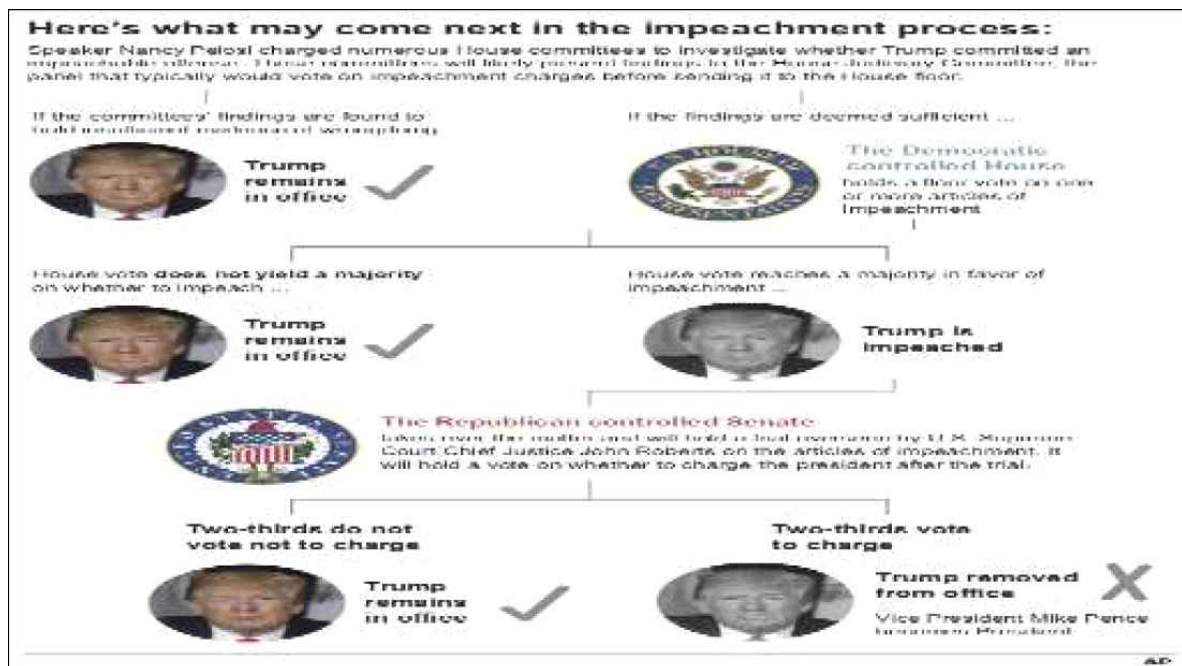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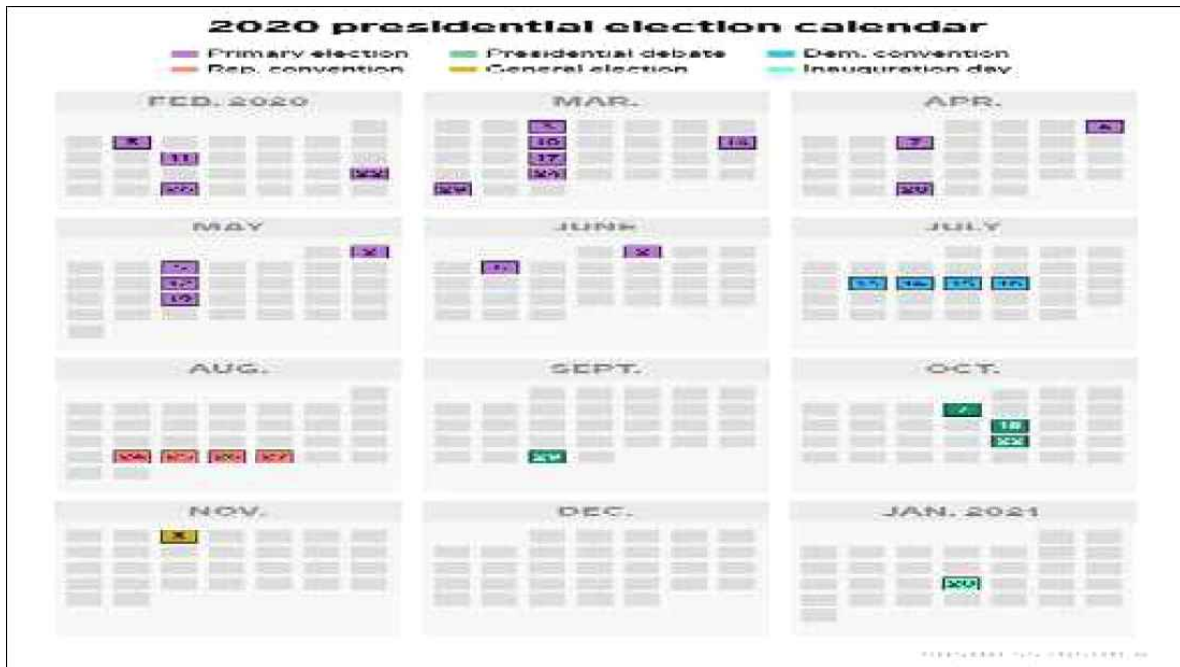
자아중심적 세계관

- 지소미아 - 한미 동맹 위기?
- 방위비 분담 - 한미 동맹 위기?
- 북미 회담 성패 조건 - All about Deal Package?
- 유엔사 재활성화는 전작권 전환 이후 통제권 강화 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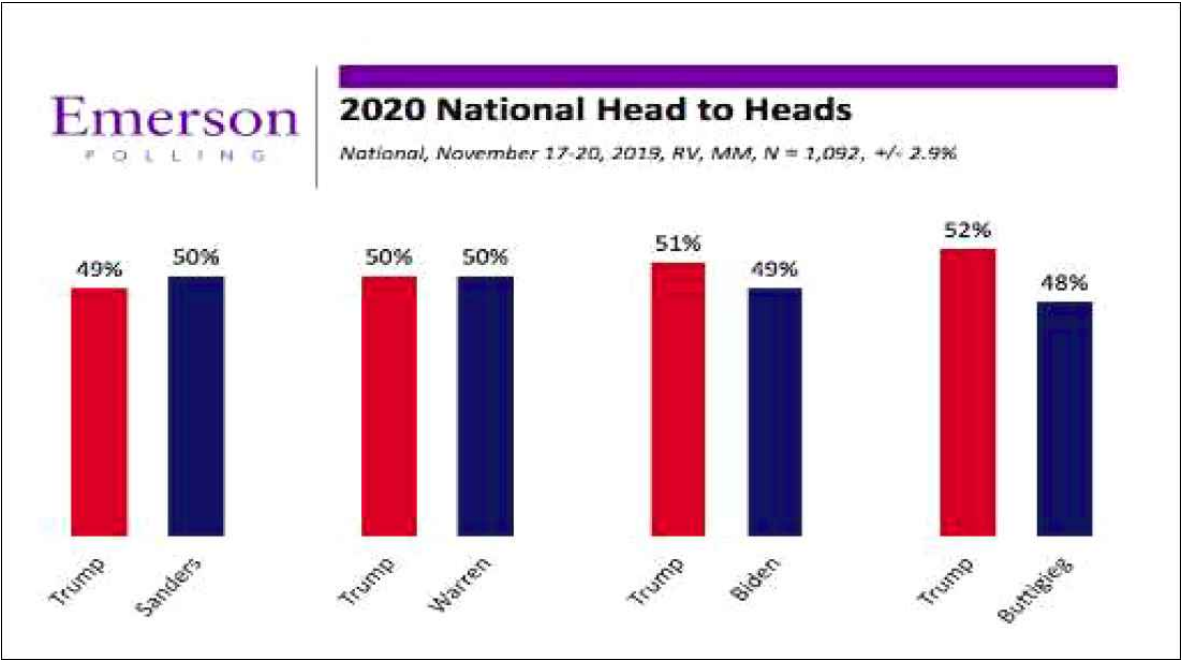
2020년 한국의 전략

- 미국 정세 상황에 바탕을 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략
- 공화당/민주당 당선시 대비 대미 전략 체계적 집행
- 대미 공공 외교의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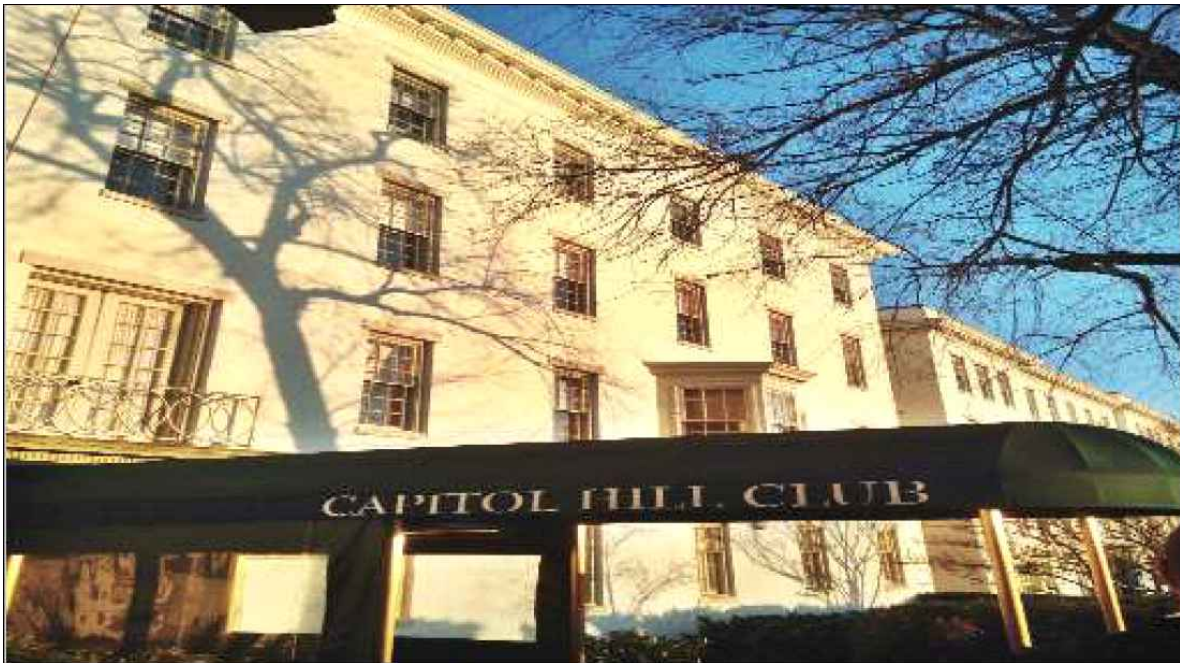












정책 제언

- 필요시 미국 대선 상황 염두한 남북미 협상 1년 연기 합의
- 융통성 있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비전 합의 추진
- 패러다임의 전환 - 키신저 전략
- 대미 공공외교 (엘리트 - 대중)
- 국내 언론만 의존하지 않는 균형잡힌 한미 관계 인식

평 가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 관련 여러 담론들은 국내의 진보-보수 담론의 틀에서 지속 진행되고 있음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적인 기대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북미 당사자의 입장에서 손익 관계와 협상 시기의 적절성 (미국의 정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야 함 (즉, 미국의 국내 정치 스케줄은 북미 협상을 위한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인 1/N이 아니라 북미 협상의 성패를 결정짓는 99%라는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과 전략구상 및 집행이 필요)
-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가 한국 정부의 진보-보수 성향과 상관없이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때, 미국의 외교정책에 한국의 국익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여론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미국 외교안보 엘리트와 미국 일반 대중들에 대한 이중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전략이든 북한 붕괴를 위한 미국의 협조든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외교안보전략의 전략과 방향성은 구조적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즉, 누가 어떻게 국제사회와 미국사회의 지배담론을 생산하고 주도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요구됨. 이스라엘-일본-사우디-독일 등 국가들의 SC전략, 공공외교 전략 벤치마킹 필요.
- 현재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 미국에서 입장 정리가 되어있지 않거나 우리 기대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들 - 평화 협정 이후 유엔사의 미래,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재활성화 논란), 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분노(?)와 배신감(?) -에 관한 과도한 담론 생산과 사안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여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비 차원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역효과와 이로 인한 사회 담론 분열 등 불필요한 비용이 확대되므로, 이러한 사안들은 과감하게 정책 연구 분야에서 배제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쟁화 방지가 필요 (Joseph Yun, James Przystup, Scott Snyder, Bruce Bectol, Robert Galluci, DIA 인터뷰 등 참고)

전 략

- 최근 이수혁 주미 대사의 취임 발언 중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남북 경제 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미국에 어떠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에게 설명되어야 함. 단순히 ICBM 등에 의한 북핵 위협 제거나 비확산 국제 레짐의 유지 이상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노력하고 비용을 들여 참여해야 하는 동기가 낮고, 한국 내부에서의 논리 개발에만 치중하게 되면 현재의 비핵화와 평화 조성 기회는 상실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엇보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러 비용을 감내해서라도 노력을 해야만 할 동기를 제공해야 함. 즉 현재 미국의 최대 국익은 중국의 패권 확대를 저지하는데 동맹국들과 기타 문제들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간장 중요. 1단계로 북한을 친중도 친미도 아닌 Gray Zoned으로 만들고, 2단계로 미국 주도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10~15년 걸리는 비핵화가 양 국의 신뢰구축과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정관계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 수립이 필요 (미 정계의 주요 정치인들, 고위 정책 결정자들,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인사들 (재계, 언론계 등))
- 이를 위하여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대 국회 공공외교 (구체적으로 대 공화당, 대 민주당 핵심 인사들, 핵심 당원들, 기부자들, 주요 위원회 보좌관들)가 강화되고, 싱크탱크나 학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초보적인 수준 (정책-대중 영향력이 거의 없는 학계-싱크탱크 인사들 소수에게만 집중하는) 현재의 공공외교를 전략적 차원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행위자들을 대상 (미 국회, 재계, 언론계, 문화계)으로 집중되어야 함 (이스라엘, 영국, 독일, 사우디 등 참조). 즉 현재 소수의 싱크탱크 및 대학연구소 중심의 공공외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실제 여론 주도층 인사들 - 대중들에게 이중의 전략적 공공외교 개념으로 발전시켜 실행해야함.
- 또한, 미국의 핵심 영향력을 지닌 언론 매체와 협회, 지자체, 학교 등 (NYT, WP, CNN, Fox News, MSNBS, Major Sunday Morning Current Affairs TV Program (Face the Nation, Meet the Press, G PS, This Week), Major Columnists (David Brooks, Thomas Friedman, Fareed Zakaria 등) The New Yorker, The Atlantic, The Weekly Standard, The National Review, The Nation, The New Republic,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Strips and Stars + Veterans of Foreign Wars, the American Region, The Capitol Hill Club, Former Members of Congress 등) 에 전략적인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확대 전략이 필요

- 두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무드 조성을 위한 과감한 신뢰 구축 및 북한 안전보장 조치 실행 필요 (비핵화 협상까지 한미 연합훈련 무기한 보류를 위한 한미 협의 등)
- 세 번째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A to Z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위한 국내정치 상황과 일정이 핵심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남북미가 공유할 필요. 하노이 협상은 마이클 코언 청문회, 최근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은 낸시 펠로시의 탄핵 성명,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절차 진행, 20년 초 민주당 경선 시작 (Super Tuesday 2월,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7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때로 전략적 연이 고려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남북미 정상 간의 물밑 합의가 필요함. 지금이 아니면 말고라는 방식의 단기적 시각을 버리고,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남북미 간 전략적 지연과 시기의 조율에 관한 대화 채널 유지가 핵심
- 네 번째로 비핵화 과정은 10-15년이 걸리는 장기전임을 인식하고, 협상 체질이 비핵화의 완성이란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협상 내용의 유지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체질은 목표가 아니라 장기전의 과정이라는 인식 보유가 필요. 협상 내용에 집착하기 보다, 협상은 발전 보완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지도자-국민 간의 신뢰 구축과 교류 확대에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야 함. 평양에 미국인들이 10만명이 살고, 원산과 금강산에 미국의 자산이 수 조 달러가 투자되고, 북한의 고위 공직자 자녀들과 과학 기술자 수 천 명이 미국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만들면, 10-15년 걸리는 핵무기, 시설, 지식 해체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조성됨.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정책과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남북미의 인식 공유와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지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조성 전략의 중심을 설정해야 함
- 다섯 번째로 미중 패권 경쟁 긴장감 완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는 다자안보체제 구성이든 신 Balance of Power (중러 vs 남북미일) 구도로든 양 쪽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기존의 북중러 vs 남북미 구도를 해체하고, 신 동북아 질서 수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끌어 가야함.

한일은 감정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대화를

진 창 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뉴노멀시대의 한일관계

작년 10월 30일 첫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한일양국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국회에서도 징용공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터라 한국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여론을 납득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야 식민지 시대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의 반발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을 ‘1965년 기본조약의 근본 전제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악과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징용공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며 일본 기업이 조금이라도 돈을 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일본 학계와 조야에서 징용공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러한 일본 내의 흐름을 반영하듯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측의 압류 신청이 제기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월 7일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이어 일본 보수 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식처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좋겠다는 각료 발언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냉담한 상황은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지탱해오던 1965년 체제(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암묵적인 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1965년 체제는 한일관계에서 약화되고 최근에는 뉴노멀(New Normal)의 한일관계가 새롭게 정착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과거사 문제가 국내 정치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일은 경제를 중심으로 경쟁관계가 확산되면서 한일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력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보다 이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현상

에 익숙해지고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의 불신감, 특히 일본 내 불신감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정당성이 일본사회에서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뉴노멀 시대의 한일관계 모습은 이번 징용공문제의 파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을 대하는 일본 여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비판적인 여론이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18년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2013년 12.2%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28.3%를 달했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2013년 31.1%에서 매년 하락해 22.9%로 최저 상태가 된 것이다. 즉 한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본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 일본인의 한국 방문 통계다.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3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전의 500만 명에 육박하던 일본인 방문이 이제 반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한일관계의 모습은 ‘격한 일본, 냉담한 한국’이 어울리게 되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 피로감’이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번 징용공 판결이나 재단 해산에 대해서도 일본이 도리어 한국에 대해 조약이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외교에서 정부의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투트랙 정책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 정부야말로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현실은 여론과 전략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예로 화해 치유재단에 대한 정부의 해산결정은 국민적인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일관계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단 해산만 발표를 한 것은 한국정부가 여론에 굴복하였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정부의 대일정책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을 극복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관리를 성공하지는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었다. 여론과 시민단체를 무시한 정책도 문제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여론만 엿보는 정책 또한 중장기 전략외교를 해치는 것임에는 자명하다. 한국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지율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의 여론 동향에 더욱더 민감해 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한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현재 상황에서는 아베 정권이 나서서 한일관계에서 물꼬를 트고자 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다.

셋째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행위자)가 사라진 것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은 중국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한일정부의 담당자들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에는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면 여론의 못매를 맞아 어려운 지경에 봉착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외교부 내 일본 관련 임무는 꺼려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과거에는 한일이 대립하면 한일 파이프를 자처하는 정치가, 경제인들이 현해탄을 건너 가교 역할을 했다. 한일 갈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

려가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었다. 또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대북문제와 동북아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한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치가들은 상대방 비판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한일관계 개선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일본 상황은 더욱더 냉담하다. 친한파들이 모두 한국문제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험한 분위기를 부추기기조차 한다. ‘한국 친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이 정착되어 한일관계 진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의 분위기이다.

2) 일본의 대한 강경정책의 배경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갈등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아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문 정부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갈등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끼쳤다.

한일이 협력하여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은 벌써 옛날 유물이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한다. 커다란 국익손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일 양국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일본 국민의 험한 감정을 이용한 국내정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베정권의 대한 강경 정책은 더 치밀하고 근본적인 외교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이 자주 사용되었던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도 일본정부의 발언에서 점차 사라졌다. 이 맥락에서 보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아베 정부의 불신이 한국 배제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즉 아베의 대한 강경 전략은 한국을 배제한 채로 동북아 전략을 짜는 전략적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외교 전략은 일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손에 넣고, 중국을 분할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최소한 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한반도를 강제병합한 후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의 점령을 시도한 것이다. 냉전시기에는 자민당의 보수파들이 ‘부산 적기론(부산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공산권의 침략을 막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즉 미국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한일 우호협력 시대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채로 동북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당할 것이라고 설파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이

었다. 최근 정부도 밝혔듯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 살 깎기 공격’을 미루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본의 피해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부 소비재 품목에서는 일본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 하지만 홍콩데모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공백을 매워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피해가 적은 지금이야말로 대화의 시간이다. 좀 더 감정적이 되면 대화는 불가능하고 인내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관계에 중재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돌아온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였다. 미국은 문 정부에게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를 되돌리라고 말미를 주었다. 결국 한일 양국이 선전포고는 하였지만,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

최근 일본에서 ‘로스트 코리아(잃어버린 한국)’라는 말이 외교관계자들 사이에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즉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을 배제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베정권에서 확연히 강화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혐한 분위기의 확대로 친한파는 사라지면서 아베에 대한 견제장치는 약해졌다. 최근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아베는 한국을 배제한 채로 동북아 전략을 노골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을 배제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아베의 주장이 확연히 강화되었다.

현재 아베 정권은 미국을 설득하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열심이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는 적극적이다. 중일관계의 개선은 미일관계 악화에 대한 보험의 성격과 한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고려한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의 제시는 전통적인 투 코리아(Two Korea: 남북을 이간질하면서 이익을 취함)정책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의 강경자세가 일본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본정치권의 대한 강경 흐름은 자민당 내 온건파라고 해도 아베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예로 고노 타로(河野太郎) 방위성대신(전 외무대신)은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가였다. 그러나 고노 외무대신의 발언을 보면 아베의 우파적인 생각을 그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반한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일본 정치권의 친한파들은 더 이상 한국문제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혐한 분위기를 부추기기조차 한다. ‘한국 친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포스트 아베에 기대를 건다고 해도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아베 정권과 대화 통로를 만들어 서로의 불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금의 상대가 최악이라고 피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냉정한 전략이 필요하다.

3) 한일관계의 심각성: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의 악순환

일본 국민들의 아베 지지는 장기 침체로 인한 경기 회복 열망, 국제관계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한중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일본 사회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에서 포스트 아베는 아베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현재 일본정권은 국민의 험한 분위기의 확대로 친한파는 사라지고 아베의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베의 지지율이 57%로 치솟는 상황에서 포스트 아베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어졌다. 게다가 지금처럼 일본에서 한국 불신이 정착된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과연 한일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강한 우려가 된다.

문제는 한일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일 양국이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보복 조치에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격앙되고 있다. 일본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관광까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정국은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분위기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반일이 애국이라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할 아베 총리와 아베 측근들이 나서서 정당한 근거없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몰아붙인다. 심지어는 아베의 측근들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설까지 흘리면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무역으로 선진국이 된 일본이 무역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한 것을 정당한 것처럼 선전한다. 게다가 외무성까지 배제하면서까지 아베 정부가 보복조치를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한일 양국에서 국익을 진지하게 논의 하기는 커녕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비춰진다. 애국심으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눈을 멀게 한지 오래되었다.

한일관계 악화는 벌써부터 국제관계(대북문제 포함)에서 코스트를 치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면서 성숙한 한일관계를 이루어왔다.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이 대립을 하더라도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다시 복원될 수 있었다. 현재의 한일 양국은 상대방을 자국의 정책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전략적인 타협을 어렵게 한다. 아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한국 배제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군항기가 한국 영토를 침범했을 때도 이전과 달리 한일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도를 지나쳐 국제사회가 외면할 정도가 되었다.

4) 변화된 한일관계의 대응법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대화에서 한일관계의 변화 징후를 볼 수 있다. 한일 정상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국회에서도 소원했던 소통채널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일정책의 근본 전제를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 대일정책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것이 그 근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는 그 근본 전제를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행동이 전제되었다. 따라서 과거사문제는 항상 일본이 풀어야 하는 숙제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에서 일본은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구(사죄와 반성, 경제협력, 기술 이전 등)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즉 과거사 문제는 대일관계에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반대이다. 즉 일본은 과거사문제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징용공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더 이상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게 징용공문제의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촉구한다. 심지어 한국은 징용공문제로 일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용공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치부한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작심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부터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일본국민들조차 한국의 주장에는 귀를 닫고, 한국의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변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에서는 미국이 항상 한국 편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였다. 수출규제조치로 촉발한 일본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지소미아 카드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정부는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던 일본을 탓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게 지소미아를 되돌리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틈타 독도를 침공하였다. 미국의 중재로 일본을 제압하고자 했던 기대는 트럼프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감정이 앞선 결과가 가져온 실패였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단지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얻어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근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에서부터 시작한 한국의 대화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일 양국의 대립은 작년 10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징용공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백가쟁명을 하듯이 지금까지 징용공에 대한 많은 해법이 나왔다. 그 중 어느 것도 양국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1(한국기업)+1(일본 기업)을 일본정부에 제안을 하였다. 이 안의 취지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징용공문제를 해결한다는 안이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이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소송 3건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매듭짓고, 그 후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게 돈을 보전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위주의 기금을 설립해 구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민간의 선금까지 포함한 기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 정부의 명분도 살리고 일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즉 1965년 기본 조약에서 징용공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매번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현금화 조치(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를 이행하면서 해결하려는 안도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화 조치를 취하는 수순은 피할 수가 없다. 현금화 조치를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매입을 하여 일본 기업에게 되돌려줌으로써 한일 대립을 막자는 안이다. 일본 정부와 현금화 조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징용공문제의 사법 처리는 일단락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징용공문제가 한국 내 해결로 일단락될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의 피해도 현실화되지 않아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13건의 소송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셋째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이다. 구상권 청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안은 한일 정부가 대립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기업이 결국 배상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안이다. 당장은 한일관계 파탄을 막으면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징용공 피해자의 배상과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징용공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한일정상들의 정치적인 결단밖에 없다. 가능한 것은 실타래가 얽힌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징용공의 문제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격상하여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일 대립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당분간 잠정적인 동결방안을 제안해 봄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징용공문제의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타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제3회의
한국의 대중·대러 전략

2019년 한중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이 성 현 (세종연구소)

2019년 한러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신 범 식 (서울대학교)



2019년 한중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이 성 현(세종연구소)

I. 요약

-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 소원해졌으나, 현재 한중관계 ‘정상궤도로 돌아서고 있음’
-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은 유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협력을 이루지 못함. 한중이 협력 공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한반도평화프로세스’과정에서 그간 한중간 협조 원활하지 못했음.
- 중한 양국은 모두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 존재.

□ 미중 관계와 한중관계

- 중국이 판단하는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억제’임.
- 중미관계 관건적 변화가 5년 정도 시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중국은 봄. 중국의 역량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준 ‘동풍17’(东风17)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상대하는 주요 무기.
- 중미 관계의 추이.
 - 단기적 전망: 지속적인 파동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 중국은 정면으로 미국에게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음.
 - 장기적 전망: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시스템 사이의 경쟁. 이는 홍콩 문제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경쟁 구도 등에서 더욱 가시화 될 것.

○ 중국이 보는 중한 관계의 협력 전망

- 안보관계: 한국이 한미동맹 주도에서 점차로 ‘디커플’(脫鉤)해서 동북아협력체제로 오기를 희망. 한국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음. 즉,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동북아다자협력체제로 단계적 이행할 지의 여부.
- 경제관계: 쌍무협력에서 나아가 일대일로, 그리고 글로벌 측면에서 한중 협력 공간 탐색.
- 전략적 관계: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시, 한중이 공통 발전 동반자, 지역 평화에 힘쓰는 동반자, 손을 맞잡고 아시아를 진흥시키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되자고 양국이 선언.

□ 진단과 전망

- 근래 한중간 회의에서 중국측은 동북아 역내 다자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 동일한 논지를 다수의 중국측 인사가 피력함. 한중간 ‘동북아 협력’이라는 말은 시진핑이 주창한 ‘아시안 안보관’(=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담당) 논리에 의하면 결국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희망.
- 미중 갈등 심화 과정 속에서 결국 중국이 한국을 중국편으로 견인하고 싶어함. 이와 관련, 최근 다른 한 회의에서 중국측 유력인사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할 시점”이라는 발언도 함.
- 특히 중국과 한국이 북핵 해결에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 공감대’ 확대에 중국측에서 많은 노력을 함.
- 중국은 미중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을 예상하고 ‘동북아 협력’ 혹은 ‘동북아 공동 안보’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을 한미동맹이 아닌 중국편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함.
- 전체적으로 볼 때, 하노이회담 결렬 후 중국은 ‘북핵 문제를 북미 양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라는 담론 확산을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할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포지셔닝’(positioning)할 것인가 하는 더 큰 차원의 외교전략 하에서 숙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은 미중 갈등국면에서 중국이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을 것을 꾸준히 당부해야 함. 또한 중국측이 북한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북한이 미국의 국내정치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도록 당부해야 함.
 - 스톡홀름 ‘노딜’이후, 북한이 미국국내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됨.

- 향후 미중 경쟁 심해질 것으로 예상. 한반도 상황 더욱 복잡해질 것. 한미동맹, 주한 미군의 전략 자산 도입, 주일미군, 주한미군, 이런 것들이 모두 격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갈 것. 이럴 때 한중간 전략적 소통 더욱 필요.
- 동북아다자안보는 결국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이 점을 인식하고 한중이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견지해야 함.
- 사드는 본질적으로 미중 강대국 정치의 소산. 이미 들어온 사드 어쩔 수 없음. 이는 다들 아는 문제. 현 미중 갈등 속에서 당장 사드 해결 힘들.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에서도 그만 사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모범적 리더십을 발휘, 대북 제재 문제, 비핵화 문제 중국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하기를 바램.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중국과 한국의 신뢰도 더욱 증진될 것임.

II. 한중관계

- 한중관계 점수는?
 - 점수 B+
 - 이 점수는 좋은 점수인가? 나쁜 점수인가?
- 양호한 측면
 - 고위급 교류 이상무
 - 무역 문제 (큰 틀에서 볼 때) 이상무
 - 12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예정
 - 12월말 한중일 3자회담 중국에서 개최 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예정
 -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한국통’ 내정
- 2%가 부족한 측면
 - ‘체감적’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보다 양국관계 덜 가까운 듯한 느낌
 -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 한중관계는 ‘허니문’, ‘밀월관계’라 불림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올랐을 때는 한중관계 ‘역대 최상’이라 불림
 - 그러한 한중관계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시기는 주지하다시피 ‘사드 파동’

- 전임 정부의 ‘사드 문제’를 유산으로 이어 받은 문재인 정부
 - 사드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가 ‘3불 입장’ 표명으로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본 듯 하였으나 여전히 양국 관계에 완전한 ‘온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III. 중국의 ‘주변외교’와 한반도

1) ‘신형주변관계’(新型周边关系)

-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장원링(张蕴岭) 원장은 중국외교부 산하 ‘세계지식’ (世界知识) 정 책학술지에 중국을 ‘발전중인 굴기하는 대국’(发展中的崛起大国)의 정의하면서 특히 중국의 날로 증강하는 군사력을 중국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그는 중국 이 ‘세계대국’이 되고 ‘세계무대의 중앙’에 가려면 먼저 ‘신형주변관계’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새로운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맹세해왔 다. 주변국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제1감응구역’이다. 중국은 세계 대국이 될 것이며, 세계 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신형주변관계’와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발걸음일 것이다.

中国誓言始终不渝地走和平发展道路，做新型大国，周边是第一层感知区。中国要成为世界大国，走进世界舞台中央，先要迈好构建新型周边关系和秩序这一步。

- 장원링 교수의 글은 2019년 9월에 실렸는데, 11월 말 검색했을 때 그의 글이 ‘추천글’ 1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이 미중관계 악화 심화 과정 속에서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웃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가깝지만 친하지 않다’(近而不亲), 양다리 걸치기(脚踏两只船)를 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서 외부 세력을 끌어당겨 자신 의 세를 키우려 한다. 상승기에 있는 중국으로선 이웃 나라와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고, 이는 실력뿐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다.²⁾

1) 张蕴岭. “周边外交，新中国外交的长期首要.” 国际网. 2019.09.29. <http://comment.csisnet.com/2019/0929/1317513.html>

2) 해당 부분 원문: 周邻国家面对的是一个“强中国”，“强中国”下的周边外交环境也不同了。以中国崛起为背景，各种势力会加大力度对中国进行制约与遏制。特别是美国，对中国的战略定位发生转变，把中国作为主要战略对手，在周边动作频频。出于多种原因，很多周邻国家对中国“近而不亲”“脚踏两只船”，在敏感问题上拉外部势力给自己助威等。对处在上升期的中国来说，处理与邻国发生的矛盾更复杂，不仅需要实力，也需要智慧，需要耐心。

很多周邻国家对中国“近而不亲”“脚踩多只船”，在敏感问题上拉外部势力给自己助威等。对处在上升期的中国来说，处理与邻国发生的矛盾更复杂，不仅需要实力，也需要智慧，需要耐心。

- 중국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협력의 외부환경이 환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변외교의 목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³⁾
- 이러한 최근의 중국의 ‘주변외교’의 점점을 통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노력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관계 더 좋게 하려면, 공공외교 더 집중할 필요. 중국이 보기에 한국의 기존 공공외교는 중국 안에 한국의 영향력을 심거나 더 크게 하려고 함. 한류 드라마가 대표적. 친근감도 느끼지만 과할 때 위협감 느껴.
- 한국이 중국에 환경 보호, 기술, 사회 거버넌스 (한국의 경험, 한국의 농촌 개발/소득 증가) 등의 경험을 중국과 나누어주면 좋아할 것. 한국은 아직도 중국에 줄 수 있는 산업발전 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많음.
- 중국의 ‘니즈’도 파악해야.
 - 중국 현재 가장 집중하는 것은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 즉, 미중관계가 안좋은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가장 골몰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몰고 가서 중국의 내부의 문제/모순 해결에 집중하는 것.
 - 일대일로로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려는 것.
 - 사드만 얘기하지 말고, 화제 영역을 넓히는 것 중요. 사드는 얘기해도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 일부 관찰자들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안보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냉철한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무계중심’을 잡고 있는 한, 현재 목도하는 한미동맹의 문제, 한일간의 문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3각안보협력체제 자체를 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봄.
- 전반적으로 중국은 현재의 한미관계, 한일관계 악화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음. 중국은 최근 중일 관계 개선이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강성 외교’ 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봄. 반면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과 공조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에서 대일 외교 위상 낮다고 봄.

3) 中国自身发展需要外部和平与合作的环境，为此，周边外交的目标是创建和平、稳定的周边环境。

- 전반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대일관계의 지위 하강했다고 봄. 그 이유로 한국이 중국, 아세안, 러시아를 통한 '외교다변화' 전략을 취함. 한중관계의 경우 사드 문제로 벌어진 한중관계의 '균열'을 '복원' (修復)했고, 또한 한국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AIIB에 적극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중관계 발전에 적극성을 보임.

IV. 미중관계와 한중관계

- 기존 미중 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보편적인 수사(修辭)는 미중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식의 자유주의적 담론.
- 즉, 미중이 때때로 갈등을 겪더라도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등 교집합이 많은 미중관계의 특성상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미중관계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논리에 기인한 것.
-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이 서로 싸우면, 서로 자멸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는 미소 냉전시대의 핵전략으로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전략을 유지하여 미소 간 핵전쟁을 예방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글로벌 문제의 대두는 결국 미중 양국을 서로 협력하게끔 만들 것이라는 미중 공동 글로벌거버넌스의 당위론도 제시됨.
-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봐
- 중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슈퍼파워로 봄. 중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중국의 부상'을 더욱 빠르게 추동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시기로 봄. 중국의 이러한 판단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로 이루어졌음
 - 당시 중국은 다음의 두가지 평가를 했음. 첫째, 미국은 쇠퇴하고 있음. 둘째, 미국과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은 피할 수 없음.
 - 문제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이 중국의 예측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 첫째,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당선 된 점.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만든 동맹체제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 최근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토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토의 자체가 그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 오히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왜냐하면 미중 갈등은 이미 ‘구조적’ (structural)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 이는 현안에 대한 쌍방의 이익관계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하면 상대방이 이기게 되는 상황. 같이 협력하여 ‘윈윈’을 추구하자는 정치적 레토릭은 하기 쉽지만, 실행하기에는 지난한 것이 현실.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9년 10월 22일 헤리티지재단에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9년 동안 잠잠했던 일본, 호주, 인도와 미국간의 안보 회담인 ‘쿼드’ (Quad)를 언급. 그러면서 그는 쿼드가 "중국이 세계에서 적절한 위치만을 유지하도록" (China retains only its proper place in the world)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제정책을 펼칠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축소시킬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쿼드’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됨.
-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입 한 것에 대해서 필자가 중국관계자, 러시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주변 해역으로 미군 자산 전개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려하는 이유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다시금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 그렇지는 않더라도 한반도가 앞으로 미일 vs. 중러 간의 무력시위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
- 미중 경쟁 심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중국은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한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음. 사드 배치 파동은 이를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건.
-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에 대해 한 발 늦은 인식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분쟁’도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
-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양국간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 즉 금방 끝날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됨.

- 미국 의회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명시한 것에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반도와 관련, 한국은 미중간 힘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예측됨. 시진핑 제2차임기의 서막이 된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보고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시대, 이른바 ‘신시대’(新时代)에 진입했다고 선포함.
-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중국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는 즈음에서 여러모로 합의가 담긴 표현임. 한국이 그런 ‘신시대’의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한 시점.

2019년 한러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대러 전략

신 범 식(서울대학교)

I. 2019년 주요 한러관계 주요 일정

-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한국과 러시아 외교부 장관 회담
-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
- 6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과 러시아 외교부 장관 회담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러 정상회담
- 7월 23일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 8월 8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 침입
- 10월 1~2일 제2차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실시
- 10월 22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 11월 20~23일 최성희 부상의 러시아 방문

II. 2019년 한러관계 정리와 평가

1. 외교·안보 분야

- (정상회담) 일본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9일 오사카에서 회담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 한-러 서비스·투자 FTA, △ 9개 다리 협력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함.
 - 푸틴 대통령은 4월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 보장과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하는 한편, 남한의 남북 대화 노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남-북, 북-미 대화 진전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러 3각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철도, 가스, 전력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양국 정상은 <9개 다리 행동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으로 향후 이어질 한-EAEU FTA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또한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300억 불,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여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러시아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선 건조를 위한 한국 조선사들과 협력을 높게 평가함.
-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통하여 양국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을 제안하였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함.

□ (장관 회담) 한국,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2월과 6월 두 차례 회담하였으며, △ 양국 관계, △ 한반도 정세를 논의함.

○ 2월 15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함.

- 양국 장관은 양국 간 교역,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명함.
 - ※ 교역규모: ('15) 160억 불 → ('16) 134억 불 → ('17) 190억 불 → ('18) 248억 불
 - ※ 인적교류: ('15) 34만 명 → ('16) 43만 명 → ('17) 51만 명 → ('18) 약 60만 명 (예상)
- 또한 양국 장관은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논의할 것을 합의함.
- 양국 장관은 <9개 다리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실질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한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 지역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러시아 측의 협력을 요청함.
-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정세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러시아가 건설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6월 17일 강경화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에서 양국 관

계, 한반도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장관은 교역, 인적 교류 확대와 더불어 △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 교역 및 인적 교류 확대, △ 실질 협력 증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함.
- 양국 장관은 지난 2월 논의하였던, <9개 다리 행동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지자체 간 협력,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기획 및 개최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미 간 대화의 재개를 통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러시아 KADIZ 침입 관련)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7월과 8월, 10월 세 차례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이하 카디즈)을 침입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함.

○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하였으며, 이에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영공 침범의 엄중함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함.

- 7월 23일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TU-95 폭격기, 중국의 H-6 폭격기 등 군용기 5대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A-50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번에 걸쳐 7분간 비행함.
- 이에 한국 공군은 A-50을 상대로 36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였으며, 한국 측은 주러시아 대사를 통하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함.
- 이에 러시아 측은 중국과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며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행하였을 뿐이라며 영공 침공 사실을 부인함.
- 7월 31일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이 미국을 견제하고 한-미-일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 8월 8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자디즈(JADIZ: 일본방공식별구역)를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사건은 일본 통합막료부가 러시아 초계기 TU-142 2대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를 비행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짐.
- 해당 발표에 따르면, TU-142는 독도 동쪽과 제주도 영공을 왕복 비행하였음.
- 한국군은 TU-142가 카디즈 침입을 하였을 때 대응 조치를 하였으며, 대부분 자디즈에서 머물러 한국 군의 대응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함.

○ 10월 22일에도 러시아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 전투기가 카디즈를 침입하였으며, 한국군이 이에 F-15K 전투기를 출동시켜 대응함.

- 10월 22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1대, SU-27 전투기 3대, 폭격기인 TU-95 2대 등 총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들은 카디즈를 이탈 후 자디즈로 비행하였으며, 다시 재진입 하여 제주도과 이어도 사이를 비행하며 서해로 북상하다 카디즈를 벗어남.
-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카디즈 내 러시아 군용기가 비행한 것은 20회에 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함.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카디즈 침입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려는 도발적인 작전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힘.

□ 분석과 평가

- 이번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에 이루어졌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관계 증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협력 의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협력 의사를 재확인한 것임.
 -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왔으며, 특히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요구 등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음.
 - 6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푸틴 대통령은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한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하여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러시아의 역할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되며 향후에도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할 것을 언급하였음.
 -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당시 제시되었던 <9개 다리>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9개 다리 행동 계획>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한 연구 및 실무자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 남-북 간, 북-미 간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러, 남-북-러 협력이 실현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된 협력에 대한 실행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화, 정례화하는 것은 향후 한-러, 남-북-러 협력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임.
 - 앞서 양국 대통령이 기대한 것처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통하여 한국은 한-러 간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한-EAEU FTA까지 이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한-EAEU FTA 협상과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러 협력을 넘어 향후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국 장관의 회담은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경제, 사회문화, 지자체 수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논의한 것임.
 -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신북방정책의

근간으로 〈9개 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러시아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베리아, 극동 개발을 위한 신동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과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9개 다리〉,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진행,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임.
- 특히, 양국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양국 간 수교를 기념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정하고,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진행할 예정임.

○ 카디즈(KADIZ) 침범은 자디즈(JADIZ) 침범과 함께 고려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중-러 간 군사 협력의 강화, 한-미-일 간 협력 저해 요인들에 인하여 카디즈 침범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초기 카디즈 러시아의 침범 의도는 한-미-일 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 하지만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행태를 살펴보면, 카디즈뿐만 아니라 자디즈도 함께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만의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기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미국의 대비 태세와 대응들을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중-러 합동 군사 훈련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카디즈 침입이 2019년 한 해 20여회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중-러 간 군사적 협력의 강화,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 한-일 간 갈등에 대한 문제의 지속 등의 맥락에서 이러한 추이가 의미하는 바를 타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함.

2. 경제·사회 분야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함.

○ 6월 20일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함.

- 양국은 공식 선언에 앞서 5월 협상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협정문의 구조를 총칙, 서비스, 투자로 분류하기로 합의함.
- 현재 한-러 양국은 1991년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번 협상

을 통하여 통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 한국은 한-러 간 FTA를 통하여 의료, 물류,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 이후 10월 1~2일 서울에서 이틀간 제2차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개최되어 양국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총칙 분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함.

- 2차 협상에는 한국 측 대표단은 전윤중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이, 러시아 측은 마리아 바라노바(Marya Baranova) 러시아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함.
-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 투자, 총칙 등의 분과를 나누어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 진행된 논의를 이어나감.
- 전윤중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가 통해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기회 확대와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시한 것이며, 신북방지역의 FTA 네트워크 확충을 위하여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재차 밝힘.

□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분야 - 철도) 신북방협력의 주요 협력분야인 철도,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관은 협력을 확대할 것에 합의함.

○ 한국과 러시아는 철도 공사, 노조, 연구소 등 다양한 수준에서 철도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5월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러시아철도공사(RZD)는 한반도종단철도(TKR) 건설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블라디미르 토카레프(Vladimir Tokarev) 러시아 교통부 차관은 TKR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국들과 철도 운영에 대해 논의 중이며, 북한의 비핵화 등을 고려하여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8월 13일 한국 철도노조와 러시아 철도 노조도 유라시아 대륙 철도 발전을 위한 한-러 철도 협력 증진에 합의함.

- 한국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러시아 철도노조를 초청하여 국회에서 “남북 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 시대”라는 주제로 대담회를 진행함.
- 해당 대담회에는 세르게이 펠레즈노프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동조합 국제운송업무 총괄 부위원장, 야니나 말리노프스키 국제운수노조연맹 내륙운송부실장, 안호영 의원이 참가함.
- 펠레즈노프 부위원장은 역사적 경험 보존 사업부터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철도 노조의 교류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자고 언급함.

- 11월 20일 철도연구원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위한 기술협력 가속화를 위하여 러시아 철도연구원(JSC VNIIZhT: Joint Stock Company Railway Research Institute)과 철도기술 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짐.
- 양국 연구소는 궤간가변대차 등 동북아 공동화차 시스템 및 부품 개발과 러시아 인증 계획,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함.

□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분야 - 에너지)** 민간 기업들은 북극 LNG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은 전력·가스 분야 에너지 협력 강화를 모색 중임.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LNG 운반선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반면,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LNG 운반선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9월 초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러시아 북극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러시아 노바텍이 주도하는 아크틱(Arctic)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 수요를 10~30척으로 계산하고 있음.
- 양 기업이 응찰하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와 관계가 있는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9월 2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힘.
- 해당 회의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안톤 이뉴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함.
- 전력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Rosseti는 한-러 전력연계(수퍼그리드) 타당성 공동연구 지속, AMI을 활용한 배전망 현대화 공동연구,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공동 R&D 등을 논의함.
- 가스 분야에서 한국가스공사-가즈프롬(Gazprom) 간 협력협정을 연장, LNG 협력 지속, 수송용 LNG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함.

□ **분석과 평가**

- 양국은 경제 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비스·투자 FTA 체결과 <9개 다리> 프로젝트 중 핵심 분야인 철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임.

- 과거 러시아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이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으로, 완제품 수출 및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었음.
 -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 한국 기업의 러시아 유망 진출 분야로 알려졌던 의료, 물류, 유통, 관광 분야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추정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보장협정(BIT)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용을 이번 협상을 통해 추가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서비스업 진출과 대러 투자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9개 다리> 분야 중 많은 주목을 받았던 철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 중이며, 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향후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간을 마련 중임.
 - 그동안 전력과 에너지 등 한-러 간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가 대북 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남북 간 관계가 과거보다 다소 경색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교류, 공동연구 등의 형태를 통한 협력은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
 - 이러한 교류 및 공동연구는 한-러 양자 간 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 남북 간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 북한을 적극 참여시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양국 경제협력의 분야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력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조선, 석유화학, ICT,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적인 교차투자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의 구도를 타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제기된 국내사업 상용화 기술의 고도화와 해외 기술도입과 신기술에 대한 도입의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부품 분야 품목에 대한 수입에 어려움을 돌파하는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한반도 관련

□ **(북-러 관계 증진)**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전략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지지하며, 북-미 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함.

-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남-북 간 북-미 간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양국 정상은 양자 간 무역과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대하여 논의함.
 -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11월 23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교부 고위 인사들과 두루 회담함.
 - 최선희 부상은 사흘의 러시아 방문 동안 블라디미르 티토프(Vladimir Titov)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Oleg Burmistrov) 북핵담당 특임대사, 알렉산드르 포민(Alexander Fomin) 국방부 차관, 이고르 모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함.
 -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 고위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발언하기도 함.
- 2019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교류는 확대 중인 것으로 포착되었으며, 양국 간 1/4분기~3/4분기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연방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북-러 간 교역 규모는 3,841만 달러(약 452억 4,698만 원)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 교역 규모인 1,734만 달러(약 204억 2,652만 원)에 2배 이상 규모임.
 - 2019년 1/4~3/4분기 북한의 대러 수출액은 185만 달러(21억 7,930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대러 수입액은 3,655만 달러(430억 5,590만 원)였음.
 - 대러 교역에서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50% 이상), 보일러 및 기계류, 의료용품, 동식물성 유지, 곡물 및 밀가루가 주를 이루었음.
 - 한편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의료용품, 약기, 보일러, 기계류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과 평가

- 지난 4월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2008년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해당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초청으로 1년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회담 이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자 간 탐색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일 가능성이 높음.
 -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과거 6자 회담의 복원을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함.
 - 하지만 앞서 북-미 간 경색 상황에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성희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처럼, 북한 측에서도 정상과의 만남을 활용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적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최근 다소 경색된 것으로 보이는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북한은 최성희 부상을 러시아로 파견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향후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하여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교역을 다변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러시아의 대북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느슨하게 한다는 평가는 일정부분 수용할 만한 사실로 보임.
- 러시아는 과거부터 남북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한 중간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 중임.
 -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료들은 북한과의 회담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11월 최성희 부상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북-미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III. 2020년 한러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고려점

□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러관계

- 동북아를 둘러싼 이중/삼중 대립 구조의 형성과 한반도 평화의 지체
 - 남북 적대관계 청산의 지체.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으며, 핵문제 해법에 대한 합의 도달은 난망해 보임. 2018년 고조되었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교류·협력네트워크, 통일]에 이르는 로드맵은 선언적 수준에라도 진전되지 못하였음.
 - 미중 전략경쟁의 고조. 오바마 시기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라고 지칭한 미국은 트럼프 시기 들어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개념에 포함 시키면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음.
 - 유라시아에 진행되고 있는 ‘신대륙주의’(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전략,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등) 대 'FOIP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거대게임이 대립적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이·삼중 경쟁 구조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지역정치 구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가 유사함. 중간국(middle ground state))의 위치를 공유함. 역내 미-중 사이에 형성된 경쟁 구도의 고조는 한국은 물론 러시아에게도 중간자 위치에서 구사하여야 할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며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그 결과 한국은 기존의 '안미 경중'(安美 經中)의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짐.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한 북한, 일본, 한국에 대한 협력을 통해 극동 러시아를 개발하고 영향력의 통로를 확대하고 아태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이 지체되고 있음.

○ 당면한 질문

-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는 이같은 시기에 동북아/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증진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동북아/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안착을 위하여 한-러 전략협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2020년은 이같은 한러 전략협력의 창의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 함.

□ 중러 전략협력 강화에 따른 도전

○ 러시아와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공격 방어 전략무기 경쟁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트레닌(Dmitri Trenin)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점차 긴밀해질 것이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이 기술이 단계적으로 중국에 이전되고 있다는 관측을 포함. 이는 중-러 협력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성격을 한층 대결적으로 고찰시킬 위험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협정(INF)을 탈퇴한 미국이 동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를 고려할 경우 미-중, 미-러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음. INF에서 탈퇴한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동아시아 내 미사일 공격 방어 전략무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경쟁 속에 선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러시아 정찰기 등의 카디즈 통과 비행이 더욱 잦아지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수집과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높아짐, 그런 의미

에서 2020년 한국은 중국과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안보적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로의 진입을 경험하게 될 것.

-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북핵문제와 한러관계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과 관계 강화를 이루어야 함.

- 먼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하여 극적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상응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한국은 기존 남-북 간 사업 재개와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북-미 간 정상회담 성사 및 비핵화 상응 조치 시행, 제재 완화 등이 이루어지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남-북 협력을 재개하고, 그동안 계획하였던 남-북 협력, 동북아시아 내 지역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남-북-러 철도 및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되어 남-북을 비롯한 남-북-러,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의 인프라 연결, 인프라 운영의 제도 마련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극적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 및 비핵화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한-러 협력의 장에 북한을 초청하는 등의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임.

- 최근 거론되는 한국이 설치한 금강산 관광 시설 등의 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국 간 대화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자 간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임.

- 비록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러 간 협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에 북한 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한-러 간 철도, 에너지 협력을 위하여 향후 북한도 이러한 장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임.

- 철도 연결, 에너지 인프라 연결을 위하여 북한과의 철도 및 에너지 인프라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향후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북한 내 철도 및 에너지 인프라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문제도 선결해야 하는 사항임.

□ 영토 안보 관련 사안들

- 한편 동북아시아 내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카디즈 침범 등의 도발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별, 수준별 대응이 요구됨.
-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동맹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동맹 강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선 전략에 따른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임.
 - 앞서 카디즈와 자디즈의 침범이 한-미-일 공조와 대비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 것처럼, 러-중 간 군사 동맹은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한-미-일 동맹과 세력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내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균열을 보이며, 한국과 일본도 과거사 문제 및 교역 갈등으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이러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러-중의 군사적 협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미-일, 한-일 간 갈등과 균열을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대선 이후 동북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한-미-일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조치로, 러-중 간 군사적 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이를 활용하여 카디즈 침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이 카디즈, 자디즈를 모두 침범하고 있음으로 향후 러시아가 이러한 비행을 할 경우 당사국인 일본, 동맹국인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 북-미 간 관계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의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최성희 부장의 러시아 방문, 북한의 대러 교역액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북한은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외교,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 북한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차츰 러시아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제 협력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의 자원 및 자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중 간 협력 수준에 달하거나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임.

○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상호의존 및 관계 강화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던지는 점도 상정해 볼 수 있음.

- 과거부터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음.
-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양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끄는 동맹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선택지로 남을 것임.

□ 2020년 한-러 정상회담은 기존 양국 간 경제 협력,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수교 30주년을 돌아보고 향후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2020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와 더불어, 지난 30년 간 양국 관계를 회고하며, 향후 경제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는 FTA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문화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수교 10주년, 20주년 행사가 진행된 것과 같이 양국은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지속할 것임.
- 또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가 마무리되어 양국 대통령이 이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

○ 2020년 한-러 정상회담은 2018년, 201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초청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혹은 서울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경우, 2020년 9월 중 진행될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하는 형식으로 성사될 것임.
- 서울에서 진행되는 경우, 2020년 9월 초에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의 총리, 부총리급 인사가 참여하고, 푸틴 대통령이 수교 30주년을 맞는 9월 20일 무렵 서울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만약 북-미 간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및 실질 협력이 진행된다면, 한-러 간 정상회담 시기는 9월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창조적인 동북아 내 소다자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한-일-러 3자협약과 동방경제포럼을 전후한 한-러-일 3자정상회담의 개최 등을 고려해 봄직함.

□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단계 고양된 관계 구축을 시도해 봄직함

- 2020년 양국 신(新)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저변확충 외교의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저변 확충으로부터 힘을 받는 서비스·투자 FTA의 체결 및 사회적 협력의 확대 프로그램 추진해야 할 것.
- 한-러시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 또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다양한 사회, 문화적 교류를 계획하고 실현함으로써 양국이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의한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